

“한국정부·국회, 개악없는 ILO 비준해야”

국제노동조합연합(ITUC)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국제노동조합연합(ITUC)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가 한국정부와 국회에 조건 없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우리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마련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파업시 사업장 점거 제한 등 사용자 단체의 요구를 반영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개악 법안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1일 한국·민주노총에 따르면 ITUC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는 지난달 31일 피지에서 열린 일반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일반이사회에는 양대노총 대표단이 참석 중이다.

ITUC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는 결의문에서 “한국정부가 (ILO 기본협약) 비준의 대가로 단체교섭권과 파업권

행사에 추가적인 제약을 가하라는 사용자단체의 용납할 수 없는 요구를 반영해 비준절차와 병행해 현행 법 개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ITUC는 “한국정부가 ILO 미비준 기본협약을 온전히 비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정부는 ILO 헌장 19조 8항에 명시된 ‘역진 금지(non-regression) 원칙’을 상기하며 노조할 권리를 침해하는 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국회는 조건없이 (ILO 기본협약)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노조법 개정은 현행법 개악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되고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협약을 온전히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미비준 ILO 기본협약 4개 가운데 3개(87·98·29호)를 비준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입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직자의 결사의 자유,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을 강화하면서도 파업시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등 사용자 단체의 요구사항도 일부 포함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는 ITUC의 지역조직으로 2007년 9월 결성됐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34개국의 59개 노총이 가입돼 2300만명의 조합원을 대표하고 있다.

한남진 기자
nihan@naeil.com

내일신문

2019년 08월 02일 금요일 017면 정책



포스코노조 임단협 승리 결의대회 1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 앞에서 열린 19년 임단투 성공적인 쟁취를 위한 포스코 노동조합 상경투쟁에서 조합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과로사’ 우정본부, 근로감독 대상으로 추진

**신창현 의원, 법 개정안 발의키로
고용부 “공무원은 노동자 아니다”
근로감독 사각지대로 방치해와**

안전사고·과로사가 잇따르고 있는 우정사업본부를 근로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올해 상반기 예만 집배원 9명이 사망했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정부기관이라는 이유로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실은 근로감독관 직무 범위에 우정직 집배원에 대한 근로감독을 포함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주중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근로감독 대상이 아니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집배원 등 노동자성이 강한 ‘현업 공무원’은 파업권을 포함한 노동 3권이 모두 보장돼 있지만, 실질적인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근로감독은 근거 규정이 없다. 신 의원의 발의안은 근로감독관 직무 범위

에 우정사업의 조직과 인사, 예산·운영 등을 규정하는 ‘우정사업법’을 포함시켰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논리로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근로감독 책임을 회피해왔다. 지난달 8일 신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집배원 과로사가 잇따르고 있으니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집배원 대부분이 공무원이라 근로감독 대상으로 잡기 상당히 어렵다”고 답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 집배 인력 1만9149명 가운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비공무원·위탁계약 노동자는 6569명으로 34.3%에 이른다. 우정사업본부 인력 10명 중 3~4명은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이를 토대로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 등이 수차례 근로감독을 요청해왔지만, 근로감독은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집배원 101명이 안전사고·과로 등으로 사망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경향신문

2019년 08월 05일 월요일 003면 종합

규제 다 풀면 ‘노동권·시민 안전 후퇴’ 우려

**민주당 “환경·노동 분야 기업 애로 해소와 규제 개혁 추진”
주 52시간·화평법 등 개정 움직임에 ‘대선 공약 파기’ 지적**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가 4일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규제완화’ 추진 내용을 포함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배제 대응 책과 무관한 방안을 추진해 노동권과 시민안전만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정·청은 4일 “반도체소재·부품·장비의 핵심 기술 역량 확보를 위해 환경과 노동 분야의 기업 애로 해소와 규제개혁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 규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

정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만들 어진 화평법은 신규화학물질 등의 유해성심사를 의무화했다.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망 사고로 개정된 화관법은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일본의 수출규제 대책으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노동 규제완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18일 연구·개발 분야에 주 52시간 근무제 특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대상에는 반도체를 테스트하는 생산직 노동자들도 포함될 수 있다. 반도체 업계 전반에 노동권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원욱 원내 수석부대표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도입을 연기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최운열 당 제3정조위원장은 고소득·전문직 노동자를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환경·노동 규제완화가 대선 공약 파기라는 비판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안전 규제강화’·‘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폐지’를 약속했다.

김윤나영·김한솔 기자
nayoung@kyunghyang.com

“제2의 독립운동 정신으로”… ‘기술독립’ 결기 다진 당·정·청

‘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범정부 대책 보니

반도체 테스트베드 조성…‘소재·부품 육성법’ 상시화 추진

“일, 명백한 도발” 비판 최고조…GSOMIA 파기는 논의 안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4일 발표한 일본의 경제침략 대응 방안은 ‘기술자립’이다. 이를 위해 예산·법령·세제·금융등가용자원을 총동원하는 등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대한 종합 ‘패키지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도발 행위’ ‘제2의 독립운동’ 등 일본을 겨냥한 강경 발언도 쏟아졌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한국 배제 방침에 맞서 당·정·청의 ‘일치된’ 행보가 시작된 것이다.

■ 내년 ‘1조원 플러스알파’ 지원

당·정·청은 일본의 ‘경제공습’에 매머드급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이미 추가경정예산 2732 억원을 통과시킨 데이어 내년 본예산에 ‘1조원 플러스알파’를 편성키로 한 것이다. 특히 연구·개발(R&D)에 예산을 지원하고 반도체 업계의 숙원 사업인 테스트베드도 만들기로 했다. 자체 개발 기술을 수시로 평가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조성

에만 수조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지원도 추진한다. 2021년 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에 장비기업을 추가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하기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 회동 결과, 지난달

31일 출범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또 향후 5년간 기술자립을 위한 100개 전문기업 육성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와 관련

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

해주기로 했다.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흥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다만 환경, 노동 분야의 규제 완화도 약속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도 패키지 대책에 담았다. 당·정·청은 “수요기업과 공급기

고위 당·정·청협의회 주요내용



내년도 본예산, 일본 경제보복

대응예산 ‘1조원 플러스 알파’ 반영

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 특별조치법, 소재·부품·장비로 확대하고 상시법 전환

대·중소기업 협력 자금 지원 및 세제 혜택

핵심전략품목 연구·개발투자 확충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5년간 100개 기업 글로벌 기술 기업으로 육성

해외 전문인력 유치 등 연구인력 확보

법정부적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 구성

업, 수요기업 간 자금·세제·규제 완화 패키지를 통해 상생협력 모델을 확고히 구축하는 것은 예전에는 없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 “제2의 독립운동 정신으로 승리” 이날 당·정·청 협의회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발표한 지난 2일 이후 첫 공개회의였던 만큼 비

장한 각오와 결기가 느껴졌다. 회의

장소인 당대표 회의실 백드롭에는 태극기 그림과 함께 “오늘의 대한 민국은 다른입니다. 다시는 지지 않습니까?”라는 문구가 걸렸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 했던 문 대통령의 2일 긴급 국무회의 발언에서 따온 말이다.

참석자들은 일본을 향한 비판 수위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에 대한 경제전쟁을 선포한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맹공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제2의 독립운동 정신으로 한·일 경제대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에 경제 공격을 가했다”고 했고, 김상조 청

와대 정책실장은 “아베 정부는 일본의 과거를 부정했고 한국의 미래를 위협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맞선 외교적 카드로 검토돼온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GSOMIA) 파기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본이 한국을

우호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교·안보 협력이 의미가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에 맞선 외교적 카드로 검토돼온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 GSOMIA 파기를 검토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근로단축 등 논란 법안까지… 1분당 1건꼴 통과

〈남녀 고용평등법·택시운송사업법…〉

2시간 41분만에 법안 142건 처리
학업·은퇴준비 등 개인적 사유로
주당 근로 15~30시간으로 단축
육아휴직도 최대 2년까지 가능
52시간제 이어 기업들 부담 가중
2021년부터 법인택시 월급제
출퇴근 시간대 카풀 허용도 의결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2시간 41분 만에 법안 142건을 처리했다. 1건을 통과시키는데 평균 68초가 걸린 셈이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에는 특정 기간 근로자에게 휴가나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지원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출퇴근 시간대 카풀 허용법, 택시 월급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택시운송사업법 등이 포함됐다. 여야는 이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1호 안건으로 통과시킨 뒤 계류 법안들을 속 전속결로 처리했다. 주당 근로시간이 최

대 15~30시간까지 줄어드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야당의 특별한 문제 제기 없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서 근로자가 회사에 학업, 자녀·부모 돌봄, 은퇴 준비, 본인의 질병·사고, 학업 등을 이유로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됐다. 이와 같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은 지금까지 임신이나 육아의 경우에만 인정돼 왔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가 달라지는데 300인 이상 기업은 내년부터, 30~300인 미만은 2021년부터, 30인 미만은 2022년부터 적용된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를 위해 유급 휴직과 근로 기간 단축을 합쳐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게 된다. 또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남편도 회사 일을 쉬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유급(有給) 10일로 늘어난다. 이제까진 유급 3일을 포함해 최대 5일까지만 갈 수 있었다.

이 법안의 통과로 경제계에서는 “주 52

시간 근로제 도입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게 생겼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다”며 “노사 합의로 풀어야 할 문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야당 관계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안 시행 후 부작용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확인 절차 없이 상임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등을 위해 연간(2019년 전체 환산 기준) 26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새 제도 시행에 혈세(血稅)도 들어간다는 얘기다. 국회 일각에서는 “정부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고용평등법을 활용해 꼼수 처리한 법안을 야당이 막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의 의도적인 ‘우회 입법’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이었다. 한 관계자는 “1건당 평균 68초가 걸렸다는 것은 관련

상임위별로 법안들 이름을 쭉 부른 뒤 찬반 버튼 누르기에 바빴다는 얘기”라며 “그 와중에 논란이 될 법안들까지 벼락 치기로 통과됐다”고 했다.

국민 생활에 영향을 줄 다른 법안들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객운수법이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도록 개정됐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제한적으로 카풀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카풀은 이해당사자들이 첨예하게 충돌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법인택시 사납금(社納金) 제도를 없애고 월급제 도입을 위한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월급제는 2021년 1월부터 시행 여건을 갖춘 서울부터 시작하되, 다른 시·도는 5년 이내에 정부가 관련 업계 및 지자체와 협의해 도입하기로 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어정쩡한 합의를 봉합해 법제화한 것으로, 앞으로 충돌이 재연될 소지가 남아 있다”고 했다.

곽창렬·이슬비 기자

화학물질 공장 인허가 3개월→1개월… 특별연장근로 확대도 검토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에 필요한
R&D용 등록면제 확인도 14일→1일
연장근로는 피해 큰 품목 선별 허용**

정부는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따라 국내 기업의 화학물질 관련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국내 기업의 화학물질 생산시설 신증설과 수출입 관련 인허가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는 현재 최소 3개월이 걸리는 국

내 기업의 화학물질 생산공장 신증설 인허가 기간을 1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 화학물질 생산공장 신증설 인허가 절차는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취급시설 검사, 영업허가 신청으로 이뤄진다. 환경부는 담당 인력을 늘려 절차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허가는 절차를 지키면서도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것을 동시에 진행시켜 전체적인 검토시간을 줄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에 필요한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의

등록면제 확인 처리도 기존 5~14일에서 하루로 크게 줄이기로 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159개 품목과 관련한 화학물질 수입·조달에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기업 담당 인력을 곧바로 배치해 신속히 해결해 주기로 했다. 일례로 불화수소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기업과 일대일 면담 방식으로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허용 대상 확대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수출 규제 품목이 1100여개 수준으로 늘어나 산업계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는 현재 일본의 수출 규제 3개 품목(에칭가스·리지스트·플루오린 폴리아미드) 관련 기업에 대해서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고용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품목과 관련 기업 리스트를 넘겨 받은 뒤 허용 대상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별연장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일단 제3국

대체 조달 등을 위해 시급성이 있거나 피해가 큰 품목에 대해 선별적으로 허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워낙 품목도 많고 품목에 따른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며 “특별연장근로 요구가 나오면 그때 가서 판단을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를 수습해야 할 경우 고용부 장관 인가절차를 거쳐 노동자의 주52시간 근무를 초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모규열 기자 hirte@kmib.co.kr

日 2차보복, 159개 품목 ‘강타’ … “부품·소재 脫일본 전방위 지원”

정부, 예산·세제·금융 등 가용수단 총동원해 ‘방어막’

일본이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행하자 정부도 일본에 대한 맞대응과 국내 산업 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조치로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 총 159개가 영향을 받을 것”

지정해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품목의 목록은 추후 공개하기로 했으나 반도체 디스플레이·정밀화학·공작기계 등 분야에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품목은 보세 구역 안에 저장 기간을 연장하고, 수입 신고가 지연되더라도 가산세를 면제한다. 또 새로운 해외 대체 공급처를 발굴할 때 조

**해외 대체 공급처 적극 발굴 … 24시간 통관체제 가동
週 52시간제 완화 … 특별연장근로 허용 업종 확대
피해기업 세무조사 유예 … 운전자금 최대 6조 보증·대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다음주 발표**

이라고 말했다. 일부 품목은 공급 차질이 불가피하겠지만 장기적으로 국산화를 이루거나 제3국에서 대체품을 발굴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일본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피해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주 52시간제 완화 등의 정책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159개 품목 가산세 면제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영향이 클 159개 품목은 ‘관리 품목’으로

사비용을 50% 이상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규제 품목을 일본이 아니라 제3국에서 반입할 경우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통관지원 체제도 가능하다. 소재·부품 생산 설비를 신·증설할 때 정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을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경우 관세를 최대 40%포인트 낮춰준다.

화이트리스트 배제에도 불구하고 일본



‘日 보복’ 대응방안 발표하는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첫 번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세 번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네 번째) 등과 함께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한국 배제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병준 기자 pjk07@hankyung.com

의 거래 기업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돼 있으면 지금처럼 포괄허가를 이용해 신속히 수입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특별일반포괄허가’ 제도를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유도하기로 했다.

주 52시간제도 완화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조건을 완화하고, 재량근로제 활용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수출규제를 받는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해선 기업의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한 상태인데 앞으로 석유화학, 공작기계, 2차전지 관련 기업까지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예산·세제 전방위 지원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예산·세제·금융 등을 총동원해 지원하기로 했다.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설비투자 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 약 2700억원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대응책 주요 내용

일본에 대한 맞대응

- 일본을 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
- 대일(對日) 관광, 식품, 폐기물 등 안전조치 강화
- 국제공조 노력, WTO 제소 준비에 박차

국내 산업 지원

- 24시간 상시 통관지원 체제 가동
- 수입신고 지연에 대한 가산세 면제
- 새로운 해외대체 공급처 발굴 시 조사비용 경감
- R&D 목적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 대폭 단축
-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및 재량근로제 활용 확대
- 국세 납기 연장 및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 다음주 발표

운전자금을 보증하거나 대출한다.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도 연장해줄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정부는 핵심 부품·소재 국산화에 연간 1조원을 투입해 이 같은 ‘무역 무기화’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대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R&D에만 연간 1조원을 투입한다. 홍 부총리는 “주력 산업 공급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100여 개 전략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대규모 지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핵심 소재 기업을 인수합병(M&A)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해당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중소기업이 부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해 대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망을 조성하는 게 목표”라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다음주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인실 한국경제학회장(서강대 경제 대학원 교수)은 “모든 품목을 국산화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시도가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며 “이미 결정이 내려진 이상 철저히 계획을 세워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훈/서민준/성수영 기자 beje@hankyung.com

실업급여, 평균임금 50%서 60%로 늘린다

민생법안 등 176건 일괄처리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도 폐지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실업급여 확대법' 등 176건에 달하는 민생 법안 및 인사 관련 안건을 '벼락처리'했다. 그간 여야가 극한 경쟁 속에 본회의를 열지 못하고 흘려보낸 나날은 무려 119일이다. 그러나 정작 이날 국회가 민생과 직결된 법안 처리에 필요로 한 시간은 단 2시간41분에 불과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이날 국회 본회의는 그간 산적해 온 민생 법안을 일사천리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남녀고용평등

법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는 학업, 자녀·부모 돌봄, 은퇴 준비 등 다양한 이유로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 청구는 임신, 육아의 경우에만 한정됐다. 회사는 대체 인력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를 수용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내년에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고 기업 규모에 따라 2022년 까지 차례로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현행법 하에서는 최대 5일(최초 3일 유급)이나, 이번 법 개정으로 당장 오는 10월 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실업급여의 지급 규모도 대폭 확대된다. 이날 본회의가 의결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직자의 생계 지원을 통한 재취업 활동 촉진을 위해 올해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이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또한 지급기간도 실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현행 90~240일에서 앞으로는 120~270일까지 확대된다.

사회적 갈등을 크게 접화시켰던 일명 '카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카풀 영업을 허용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다.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 월급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들 법안은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보이스피싱·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이 범죄자를 상대로 복잡한 민사소송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국가로부터 피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이날 의결된 '부패재산 몰수법 개정안'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범죄 수익 대상에 다단계 판매나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조직적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재산을 포함시켰다. 또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아동을 정신적으로 지배한 뒤 저지르는

2일 본회의 의결 핵심 법안

남녀고용 평등법	학업, 자녀·부모 돌봄, 은퇴 준비 등의 이유로 주당 근로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 청구 가능
고용보험법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60%로 확대. 지급기간도 최대 270일까지 확대
부패재산 몰수법	국가의 범죄수익 몰수 추징 대상에 다단계 판매·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 피해 재산 포함
성폭력범죄 특례법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 공소시효 폐지

'아동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이날 의결된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에도 사건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지원 기자

첨단 소재·부품 R&D 강화…첫 단추는 주52시간 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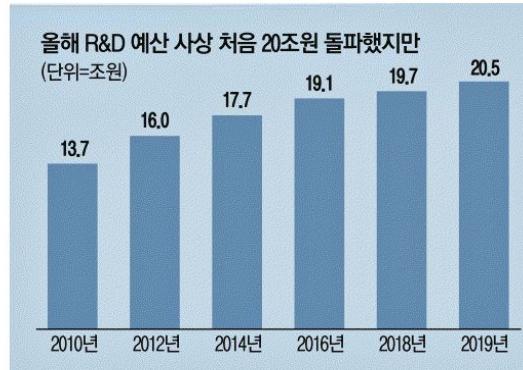
새로 짜는 국가전략

국내 5대 그룹 기술 연구소에서 일하는 A박사는 최근 하던 연구를 일시 중단하고 강제로 휴가를 떠났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켜야 해 인사 부서에서 강제 휴가 명령을 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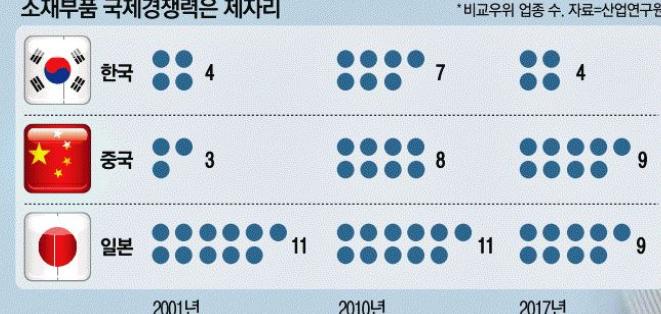
A박사는 “전에는 밤새워 일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만큼 수당도 받았다”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하루 8시간을 넘겨 일하는 때는 손에 꿈을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한일 경제전쟁 상황이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연구의 맥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될지 몰라도 누적되면 신기술·신제품 개발이 늦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풍력에너지 사업을 하는 B사는 정부의 부실한 제도 설계 탓에 신성장산업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정부는 미래차, 로봇 등 11개 신성장산업 전담 연구 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B사 연구원들은 신성장 R&D와 일반 R&D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견 자동차 부품사 관계자는 “대기업은 전담 인력을 두는 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중소·중견기업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정부의 R&D 세액 공제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한국 경제 도약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탈규제와 이를 통한 R&D 강화가 핵심적인 국가 전략 과제로 꼽힌다. 탈규제와 R&D 강화는 기업



소재부품 국제경쟁력은 제자리



국가 R&D 예산 20조 불구 주먹구구식 예산배분·집행 기술경쟁력 제자리걸음

대기업 연구소도 주52시간 밤샘커녕 오후 6시면 퇴근 세혜택 줄여 투자의욕 꺾여 협력업체 신기술 개발해도 대기업 외면에 사장되기도

투자와 직결되는 문제로, 한일 경제전쟁 최전선에서 뛰는 기업들이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항목이다.

차제에 지지부진했던 노동·환경 등 규제 개혁에 정부가 속도를 내고, R&D 예산 집행과 세계 지원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면 한국 경제 기업들이 일본을 극복하는데 그치지 않고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4일 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R&D 예산은 사상 처음 20조원을 돌파해 20조 5238억원을 기록했다. R&D 예산 20조원 시대를 열었지만 산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국가 R&D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부터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시각 때문이다. 한 중견 자동차 부품사 관계자는 “국가 R&D 과제가 단기 성과 창출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지금 문제가 되는 소재·부품 국산화 장기간 연구를 위해 지원하면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럴다 보니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은 기존 연구 성과를 조금씩 손봐서 국가 R&D 예산을 따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기초과학 연구,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 등은 뒤로 밀리게 된다.

그 결과로 한국의 소재·부품 경쟁력은 극일은 커녕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01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췄다고 인정받은 소재·부품 업종(현시비교우위수가 1보다 큰 업종)은 4개에서 2010년 7개로 늘었지만 2017년 다시 4개로 줄었다.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3개→8개→9개, 일본은 11개→11개→9개 등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기초소재 분야의 R&D가 중요한 화학, 플라스틱, 금속, 기계 부문에서 한국이 일본에 절대 열위를 보이고 있다고 최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불 꺼진 연구소가 늘어난 것도 한일 경제전쟁 승리를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애물로 꼽힌다. 연구를 더 하고 싶어도 근로시간 단축 규제에 막혀 할 수 없다. 품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를 국산화하기 위해서는 밤새워 연구하고 실험을 해도 최소 3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1개월 이상 밤을 새워가며 연구·실험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흥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달 18일 “R&D 분야의 주 52시간 근무제 특례(선택적 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관련 기업들의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기재부는 “흥 부총리 발언은 R&D 분야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라며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내놨다.

한때 전 세계를 누비며 수입·수출 거래

처를 발굴하고 소재·부품 소싱에 나섰던 상사們들의 역할과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글로벌 벤처체인과 국제 분야 질서를 고려할 때 반드시 우리가 다 국산화할 필요는 없다”며 “이럴 때 전 세계 시장에서 최적의 소재·부품 공급처를 찾아 주던 게 상사의 기능이었는데 최근에는 개발사업과 완제품 수출입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중소기업 상생은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들이 극일 전략으로 들고나온 핵심 과제다. 충북 지역에서 카메라 부품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R&D에 성공해서 수출을 하는데 정작 국내에선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재 국산화의 선두 주자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 대기업에서 안 써주면 소용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문자웅·조성호 기자

탄력근로 기간 6개월로 늘리고 화학물질규제 현실맞게 개선을

당장 효과있는 탈규제

**수도권 공장 제한 풀어
첨단 R&D 인재 유치
기업 옥죄는 수사도 자제**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을 주력으로 하는 국내 중견기업 A사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고민에 빠졌다. 정부에 매년 0.1t 넘게 사용하는 신규 공정용 화학물질은 물론 기존 신고했던 화학물질(1t 이상)까지 전부 안전성 평가를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A사 임원은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심사·등록을 받으려면 생산 지역으로 인한 손실과 평가에 드는 비용 등 추가 지출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화학물질이 모두 유해하거나 위험한 게 아닌데 무조건 안전평가를 받으라는 규제는 선진국 어디에도 없다. 명백한 과잉 규제”라고 지적했다.

반도체 같은 주력 산업에 대한 일본의 핵심 소재·장비 수출규제를 ‘국산화’로 뚫자는 여론이 확대되는 가운데 과감한 탈(脫) 규제가 극일(克日)의 열쇠라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R&D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부터 우선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화평법과 2015년 시행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다.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를 계기로 이듬해 화평법과 함께 제·개정한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배치·관리 기준을 엄격히 규제하고 영업자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도록 했다. 2012년에는 영국계 기업 멕시켐이 전남 광양에 불화수소(에칭가스) 생산 공장

산업계 주요 규제 완화 요구



화평법

- 유해성 없는 화학물질 평가·심사 완화



바이오 산업

- 유전자 검사 가능 질병 확대
- 해외 임상시험 세액 공제 확대



주 52시간근무제

-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법안 통과



수도권 규제

-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 수도권 규제 자유구역 포함



세제 지원

- 축소되는 R&D 세제 지원 다시 확대
- 신산업 R&D 세액공제율 요건 완화



기타

- 무리한 기업 상대 기획 수사 자제

고 있다.

국내 한 정보기술(IT) 기업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R&D 직군에도 일괄 적용하면 개별 과제에 드는 시간과 인건비가 기하급수로 늘어난다”면서 “중국·일본·독일처럼 직군별 근로시간 제한을 차등하는 근로유연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재난 상황’으로 규정해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지 않는 특별연장근로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권력 기관을 동원해 기업을 옥죄는 수사·조사를 그만할 때도 됐다는 지적이 많다. 재계 역시 명시적인 불법·탈법 행위까지 방지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애매하고 자의적인 기준과 잣대로 기획 수사를 벌여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말아 달라는 뜻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이 알아서 잘 할 수 있도록 당분간이라도 과도한 기업 옥죄기 수사·조사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R&D에 대한 세제 지원 축소도 개선돼야 할 점으로 꼽힌다. 실제로 대기업에 대한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2010년 발생액 기준 3~6%, 증가액 기준 40%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각각 0~2%와 25%로 대폭 줄어들었다.

신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도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다. 현재 정부는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 20~30%, 중소기업은 30~40%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형 자동차, 로봇, 바이오 등 신성장 R&D 분야 11 가지를 제외하면 비용 공제를 인정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는 “신성장 R&D 세제 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달라”고 올해 6월 정부에 건의했다.

문지웅·이종혁 기자

주52시간에 간접비용까지 급증 신고리 5·6호기 또 중단 위기

공사참여한 일부 협력업체들 한수원에 공기지연 비용 요청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공기 연장으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이 또다시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한국수력원자력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공사에 참여하는 일부 협력업체들은 최근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공기 지연에 따른 간접비용 보전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삼성물산과 한수원은 보전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현재 현장 인력 2500여 명 중 절반에 가까운 1100여 명을 공급 중인 3개 하도급 업체가 ‘공사 중단’을 앞세워 한수원과 삼성물산에 임금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행법상 공기 연장에 따른 관리비 증가분 외 인건비 상승에 대해선 보전해줄 법적 규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탈원전’ 공약에 따라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에 따라 4개월 후인 10월 재개됐다. 공사 중단 여파로 이미 250억원대 피해를 입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7월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야간 공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초 산업통상자원부는 완공일을 당초 2022년 10월에서 2024년 6월로 20개월 연장하는 변경고시를 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건설업계는 지난해 7월 1일 근로시간 단축 법 시행 이전에 계약된 공사 현장을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건의를 국회 등에 해왔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기 지연과 기업의 간접비용 증가, 지방자치단체 보상금, 입찰 불이익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건설·조선업과 같은 장기 수주사업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입찰 또는 계약한 사업부터 단축근무제가 적용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임성현·정지성 기자

여당서 나오는 ‘52시간 속도조절’ 법안

300인 미만 업체 등 1년 연기 추진

여당 내부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민간택지(宅地) 분양가 상한제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반대하거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도입 시기를 1년 이상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

르면 이번 주 발의한다. 현행법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하는 법안은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은 2022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은 2024년으로 미루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필 기자 A8면에 계속

與의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반대”

경제정책 속도조절론 A1면에서 계속

1주택자 종부세 감면도 이미 추진

민주당 최운열 의원도 고소득 전문 직종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자발적으로 초과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로제를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다”며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에 근로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법안을 준비하려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 정부에서 주 68시간 근로제를 주 52시간 근로제로 바꿨던 것은 경기가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가 15%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는 시기에 시행되면서 일자리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고 산업 전반이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

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그는 4일 본지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돈을 빌려 분양을 받을 여력이 없다”며 “신규 물량의 분양가를 제한해봤자 자금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만 혜택을 볼 것이고,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은 기존 물량으로 몰려 오히려 전반적인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김병욱 의원이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세대가 1주택만 20년 이상 25년 미만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지금보다 10%포인트, 2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20%포인트 더 깎아주는 법안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가 1주택만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50% 깎아주게 돼 있다. 이보다 앞서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 기간에 따른 종부세 공제율을 전반적으로 높이고, 실거주 기간이 14년이 넘으면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경제

2019년 08월 05일 월요일 A01면 종합

與 ‘분양가상한제 보류,週 52시간 연기’ 목소리

〈민간택지 아파트〉

〈300인 미만 사업장〉

원내지도부·정책라인서 수정 요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정책라인에서 부작용이 큰 경제정책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곧 발표할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보류와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연기 요구가 대표적이다. 특히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선 “가격 통제 정책은 반시장적으로 오히려 서민들만 피해를 볼 것”이란 지적이 여권 내부에서 나온다. ▶관련기사 A10면

최운열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분양 가상한제 도입은 부동산시장의 정상 작동을 방해해 기존 주택 가격만 올릴 것”이라며 “우리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 가장 큰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도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와 국토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주택 공급이 줄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지도부에선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 요구가 나왔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 예정인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제를 1년 이상 유예하는 법안을 조만간 낼 것”이라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에 숨통을 트워주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인적 소신에 따른 법안 발의라고 했지만 여권 지도부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연기 법안을 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분양가 상한제 신중해야”… 경제 현실 살피자는 與 지도부

민주당 “단합이 최우선” → “할 말은 해야” 기류변화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집권 후 “단합이 최우선”이라는 기치 아래 한목소리를 내자는 분위기가 강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당·정·청이 엇박자를 내며 지지층이 등을 돌린 열린우리당 시절의 경험 때문이다. 이견은 되도록 비공개 회의에서 표출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경제 정책과 관련해 자기 목소리를 내는 의원이 늘고 있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8개월여 앞두고 민심에 반하는 정책엔 “할 말은 해야 한다”는 기류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경제정책은 ‘현실’과 ‘정책적 선의’를 구분해야 한다”며 “민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국회의원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양가 상한제, 선의만으로 곤란”

최근 여권 지도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선거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 문제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의 대표 소신파 충·한 명인 최운열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보다는 부작용 만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위원장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거친 대표적 거시경제·금융 전문가다.

최 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은 이기려고 하는 순간 의도대로 될 수 없

“과거 실패 뒤풀이 말아야”
최운열 “임대차 계약 2년으로
연장 때 세입자들이 고통 겪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적극 추진에
“시장 왜곡으로 서민 피해” 제기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 추진
300인 미만 사업장 도입 시기
1년 이상 늦추는 법안 발의
고소득 전문직은 제외 법안도

사업장 규모별 주 52시간제 도입 시기	
현행	
50인 이상 300인 미만	2020년 1월 1일
5인 이상 50인 미만	
2021년 7월 1일	
이원욱 의원안	
200인 이상 300인 미만	2021년 1월 1일
100인 이상 200인 미만	2022년 1월 1일
50인 이상 100인 미만	2023년 1월 1일
5인 이상 50인 미만	2024년 1월 1일
전문직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법안	
현행	
소득에 관계 없이 주 52시간제 일괄 적용	
최운열 의원안	
주 52시간제 제외 연봉과 분야 등을 세분화	

자료 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반대와 주 52시간 근로제 수정 등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부터),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윤후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한경DB

다”고 꼬집었다. 과거 정부가 주택임대차 계약 최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사례로 들며 “2년치 전셋값 인상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바람에 세입자들이 커다란 고통을 겪었다”며 “정책은 선의로 만 볼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장 가격 통제 문제를 너무 쉽게 본다는 이미지를 심어줘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안정될 수 있지만 이후엔 주택 공

급이 줄어드는 등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서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이미 올라버린 기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도 않는다”고 했다.

당내 의원들의 이견도 적지 않다. 한 원내 핵심 의원은 “시장이 크게 왜곡되고, 가격 상승이란 부작용만 나타날 것”이라며 “다만 국토부가 워낙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입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

개 발언은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여당 지도부와 국회 국토위 의원들을 찾아 분양가 상한제의 필요성과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법 시행령의 상한제 적용 요건을 고치면 돼 입법 사항은 아니지만 워낙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여권의 동의와 지지는 필수적이다. 한 국토위 관계자는 “주무 장관이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하는 상황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반대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 보완 안하면 산업계 낭패”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보완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수석부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시기를 1년 이상 늦추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종업원 300인 미만’ 사업장의 제도 적용 시기를 최소한 1년 이상 더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과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의 법안은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도입 시기를 2021년 1월 1일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은 2022년 1월 1일 △50인 이상 100인 미만은 2023년 1월 1일 △5인 이상 50인 미만은 2024년 1월 1일로 늦추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 수석부대표는 “현장에서 기업인을 만나 보면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며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의 연착륙을 돋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고소득 전문직을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제도에서 제외되는 직종의 기준을 연봉·분야 등으로 나눠 명시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자발적인 조과 노동이 많기 때문에 이 제도를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다”며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에 근로시간 제한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두 의원은 민주당 당론이 아니라 개인 소신에 따른 법안 발의라고 설명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취재수첩

노경목 기자

경제부

autonomy@hankyung.com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를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재량근로제 대상에 넣었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핵심 영역으로 꼽히는 투자은행(IB)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업계의 요청이 없었다”며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확인해보니 이는 사실과 달랐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와 관련해 고용부 실무자들과 수차례 만난 자리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고용부 담당자도 “IB 업무와 관련된 요구가 있었던 것이 맞다”고 뒤늦게 털어놨다.

고용부는 왜 사실과 다른 답을 했을까. 이면을 살펴보니 주 52시간 근로제가 얼마나 설익은 가운데 도입됐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우선 고용부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제 놓고 말바꾼 고용부

“너무 많은 기업과 업종에서 주 52시간 업무 제외 요청을 해와 모두 동일한 선상에 놓고 요청받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터넷 ‘국민신문고’부터 고용부 장관 간담회까지 갖가지 방식으로 요청이 잇따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주 52시간 근로 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는 고용부 실무자들이 다양한 사안을 검토해 결정한다. IB는 한국 금융사의 핵심 업무인 데다 정부도 육성 방침을

IB 업계서 요청하지 않았다더니 뒤늦게 “검토 과정서 제외” 고백

수차례 밝혔지만, 정작 고용부 실무자의 정성적 눈높이를 통과하지 못해 요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간주된 것이다.

IB 업무 중 어디까지를 주 52시간 근무에서 제외할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인수합병(M&A) 부터 채권 매매까지 각양각색의 업무가 함께 묶여 있는 IB 업무 전체에 일괄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지적이 고용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IB

업무 전반을 놓고 분야별로 세분화한 뒤 고용부 실무자가 일일이 검토해야 주 52시간 근무 제외가 가능한 세부적인 항목을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애널리스트 등의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 제외를 발표한 같은 날 고용부는 ‘재량 근로제 운영 안내서’를 발표했다. 주 52시간 근로에서 제외되는 근로 형태가 하나씩 늘어나며 제도의 졸속 도입 비판이 잇따르자 “적용 제외 기준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IB 업종을 통해 들여다본 고용부의 주 52시간 근로 적용 제외는 여전히 뚜렷한 기준 없이 표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사례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경험을 쌓는 동안 혼란과 고충은 기업들의 몫이다. 현장에서는 경쟁력 약화에도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있고, 사업주의 형사고발 위험을 무릅쓰고 변칙적인 근무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고용부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해야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 답답할 따름이다.

일본 최저임금 ‘1000엔 시대’ “여성 인력 효율적 활용 열쇠”

“연금보험료 등 면제 위해
최저임금 오르면 주부들은
노동시간 줄여 수입 낮춰”

일본이 도쿄 등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최저임금 1000엔(1만900원) 시대를 열었지만 여성인력의 활용이 과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1000엔 시대를 열 것으로 보이는 2023년까지 여성의 소득 향상과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일본 언론은 분석했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문기구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소위원회는 지난 달 31일,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3%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3%대 인상은 2016년 이후 4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도쿄도(1013엔)와 요코하마시가 있는 가나가와현(1011엔)은 사상 처음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이 1000엔을 넘어섰다.

일본은 최저임금 수준이 도도부현에 따라 차별적으로 시행하는데, 두 지역이 1000엔을 넘어선 데 반해 가장 낮은 가고시마현은 787엔(8580원)으로 도쿄와는 226엔(2460원)의 차이를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일, 올해와 같은 상승률이 계속되면 2023년에 전국 평균 1000엔 대에 접어든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소비의 증가→생산성 향상→소득 향상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

일본의 주요 지역별
2019년 시간당 최저임금



도쿄	1013
가나가와	1011
오사카	964
아이치	926
치바	923
교토	909
효고	898
홋카이도	861
후쿠오카	840
미야기	824
후쿠시마	798
가고시마	787

(단위:엔) *자료:일본 중앙최저임금심의회

했다. 특히 이러한 선순환 구조의 정착을 위해서는 여성인력의 효과적 활용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급은 4년 전에 비해서 8.7%가 상승했다. 하지만 실제로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의 소득총액은 1.6% 상승에 그쳤다. 이는 1인당 근로시간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주부들이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면서 노동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는 연금 및 의료보험료 문제와 직결돼 있다. 남편이 있는 60세 미만의 주부는 수입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 연금이나 의료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시간급이 오르면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스스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 슈퍼마켓 협회 관계자는 “시간급이 상승하더라도 좀처럼 일손을 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국개호사업자협회 관계자도 “직원이 노동 시간을 스스로 줄이고 있어, 일손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무라세 타쿠토 일본총합연구소 부연구원은 “수입의 기준을 넘어선 채로 최저임금을 올리면 파트타임에 종사하는 주부는 더욱 근로시간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65세 이상 비정규직 종사자는 지난해 340만명에 달해 4년 전에 비해 40% 이상 증가했다. 이들은 전체 비정규직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지금까지 65세 비정규직의 상당수는 퇴직한 남성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여성 고령자가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1.15배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인구 가운데 72.6%가 여성이다. 이들은 대부분 음식점과 서비스업, 영세한 제조업체 등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미혼 여성이나 이혼한 여성이나 늘어나면서 노후의 생계를 의지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여성의 임금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지적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최저임금 사용자위원 “30년 된 현행 제도개선해야”

전원회의 소집 요구

“구분적용·산정시간 논의”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경제·사회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2021년 적용 최저임금부터는 반드시 선 제도개선 후에 논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을 1일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은 “현 최저임금제도는 30여년 전 경제·사회 환경에 기반해 만들어진 제도”라며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인상되고 상대적 수준도 중위임금의 60%를 넘어서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하면서 제도적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은 높아진 최저임금 준과 경제·사회 다변화를 반영해 현실에 정합하고 세련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해야만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사용자위원들은 또 “무엇보다 최저임금위 위원장도 금년도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이제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에 대해 최저임금위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본연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약속을 이행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위 제11대 사용자

위원 전원은 최저임금법 제17조에 의해 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문제,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 합리적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12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2019년 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한남진 기자 nihan@naeil.com

東亞日報

2019년 08월 05일 월요일 A01면 종합

실업급여 창구에 두번 내몰리는 취약층

고용악화에 실직→취업→실직 반복 상반기 수급자 14%가 2회이상 받아

“실업급여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2일 서울 강남구 강남고용센터 실업급여 창구에서 만난 이모 씨(62)는 “내가 (실업급여를) 두 번이나 받게 될 줄 몰랐다”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이 씨는 2017년 다니던 식품공장이 매각돼 일자리를 잃고 나서 6개월간 실업급여를 탔다. 지난해 동 주민센터에서 불법 부착물 제거 공공근로를 했지만 1년 계약이 끝나 이날 다시 실업급여 창구를 찾았다.

고용 사정이 악화되면서 올 상반기(1~6월) 실업급여 수급자 7명 중 1명은 이 씨처럼 두 번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로 나타났다. 4일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에 따르면 상반기 실업급여 수급자 94만3819명 가운데 반복 수급자는 13만5618명(14.4%)이다. 올 들어 실업률이 6개월 연속 4%대를 기록하는 등 고용 불안정이 이어지며 실업급여 수급자의 약 15%는 취업과 실직을 반복한 것이다.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으면 횟수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올 실업급여 수급자는 사상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 실업급여 지원 인원을 지난해 수준인 131만 명으로 예상했지만 상반기에만 94만 명(72%)이 받았다.

박은서 기자 due@donga.com

▶A14면에 관련기사

“단기 일자리 전전… 늘 불안해요”

실업급여 창구 두번 내몰리는 취약층

실업급여를 두 번 이상 받는다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내몰려 본 적이 있는 근로자가 제대로 진입해 정착하지 못하고 또다시 노동시장 밖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뜻이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2017년 18만9043명, 2018년 20만1405명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상반기(1~6월)에만 지난해의 67% 수준인 13만5618명을 기록했다.

● 두 번 이상 실업급여 창구 찾는 60대 늘어

2일 동아일보 기자가 찾은 서울 지역 고용센터 실업급여 창구에서는 실업급여를 한 번 받아 본 경력이 있음에도 다시 받으려 온 사람을 적잖게 만날 수 있었다. 마포구 서울서부고용센터를 찾은 강모 씨(68·여)는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다 요양원이 문을 닫으면서 올 4월 말 권고사직을 당했다. 강 씨는 3년 전에도 요양원에서 일하다 해고돼 6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았다. 그는 “40대 딸 2명과 같이 사는데 사실상 내가 가장이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만 불안해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며 연신 구인 공고 게시판을 살폈다.

상반기 반복수급자 13만명

‘취업-실업’ 고용 악순환에 노출

10월부터 지급액-기간 늘어나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빨간불

두 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4년 4만5279명이던 60세 이상 반복 수급자는 2016년 4만9113명, 지난해 5만6412명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엔 3만7709명이었다. 이런 추세면 올해 6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노후 대비가 되지 않은 고령 근로자일수록 취약한 일자리를 전전하다 실업급여 창구를 찾았다. 급식업체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하다 올 2월 실직한 김모 씨(65·여)도 실업급여가 두 번째다. 혼자 사는 김 씨는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65세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그는 “최근 허리 수술을 받았지만 몸이 감당할 만큼은 일하고 싶다”며 “다음 달까지 일을 못 구하면 3시간짜리 초단시간 식당 아르바이트라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60대 이상

고령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며 “이들 반복 수급자는 단기 일자리를 거치다 여러 번 노동시장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빨간불 켜진 재정, 고용보험료 부담 가중

고용 한파에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보험가입자 수가 1300만 명을 넘으면서 올 실업급여 수급자는 사상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올 실업급여 지원 인원 131만 명을 훨씬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세라면 실업급여 지원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실업급여는 요건만 맞으면 지급해야 하는 의무지출 대상이다.

문제는 실업급여를 대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이다. 국회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일 통과시키면서 10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오르고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난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것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가 빠르게 느는 상황에서 지급 수준이 증가하면 기금 부담이 커진다.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은 8082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고용보험료율을 현재 1.3%에서 1.6%로 약 23% 올릴 예정이다. 근로자 1인당 연간 4만 1000원, 사업주는 42만8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늘어나는 실업급여 지출을 국민 부담으로 지우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불경기 때는 보험료를 그대로 두고 돈을 푸는 효과로 경기 부양을 해야 한다”며 “보험료를 인상해 지급하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민간 일자리가 늘어나지 못하고 실업률이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실업률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되지 못할 경우 인상될 보험료율로도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고재민 인턴기자 고려대 사회학과 4학년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등 682개 시민사회단체가 속한 아베규탄시민행동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이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할 때까지 부당한 경제보복에 맞서 싸우겠다"고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광복절 코앞인데…" 日 규탄 전방위 확산

한반도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폭염이 아니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때문이었다. 규탄대회가 열렸고, 계약했던 일장기가 내려졌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자매 결연 중단 조치도 나왔다. 광복절을 앞둔 시점이라 일본 규탄 분위기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오후 1시, 일본 정부의 결정이 알려지자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베규탄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행동은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한국 YMCA, 흥사단 등 682개 시민단체가 결성한 단체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 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군사 대국화를 계속 추진하고, 우리나라를 경제군사적 하위 파트너로 길들이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정부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등 강력한 대응책으로 맞설 것을 주문했다. 시민행동은 "국민적 합의도 없이 박근혜 적폐정권이 강행한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즉각 파기하고, 이미 해산된 화해치유재단에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즉각 반환해 한일

시민행동, 日 대사관 앞 규탄대회
"주말마다 광화문광장서 촛불집회"

강남구청, 테헤란로·영동대로 일대
만국기 중 일장기만 철거로 항의

위안부 합의의 파기를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 동구 초량동 주한 일본영사관 앞에서도 시민단체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자체들도 일본 규탄 대열에 합류했다. 서울 강남구청은 강남 한복관에 걸려 있던 일장기를 철거하는 '페포먼스'로 항의의 뜻을 나타냈다. 강남 테헤란로와 영동대로 일대에 국제 교류, 화합, 협력을 상징하는 의미로 대로변에 만국기가 내걸려 있는데, 이 가운데 일장기 14개만 골라서 옮겼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경제 침략 선언"이라며 "일본이 이성을 되찾고 한국에 대한 규제를 철회할 때까지 항의 표시로 일장기를 떼어낸 자리 를 비워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 지자체와 상호 교류를 끊겠다고 나선 지자체도 등장했다. 최대호 경기 안양시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를 결정한 2일 서울 강남구청 관계자가 테헤란로에 게양된 만국기 중 일본 국기만 떼고 있다.

장은 이날 오후 "시민과 함께 경제독립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규제 철회 시까지 행정 물품 및 벤처 공사에 일본 제품 사용 금지, 일본 자매 도시와의 친선 방문 취소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다. 앞서 경기 고양시 등은 공무원 일본 연수와 기관 방문 등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시민들도 일본의 행태가 적반하장이며 분통을 터뜨렸다. 직장인 윤혜미(37)씨는 일본 경제 보복이 "정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유니클로 불매는 물론, 일제 비타민 액티넘도 먹지 않으려 한다"고 밝혔다. 대학생 정우신(28)씨는 "일본은 한 일 중 한 나라가 무너질 때까지 해보자는 속셈인 것 같다"며 "분별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움직임은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행동은 당장 주말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일본 규탄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광화문 집회에 시민 5,000여명이 참석했는데 이번 주가 보복으로 3일과 10일, 15일 집회 참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 등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차를 예정이었던 광복절 행사를 일본 규탄대회, 혹은 결의대회로 성격을 바꾸어 치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인택·배성재 기자

일본 기업이 최다… 국내 최대 해외 취업박람회 취소

정부 “일 기업 비중 축소 등 검토”

정부가 ‘한·일 갈등’ 영향으로 오는 9월 열릴 예정이던 국내 최대 규모의 해외 취업박람회 ‘2019 글로벌 일자리 대전’을 취소했다. 이 박람회는 일본 기업이 가장 많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고용노동부는 9월 24일과 26일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 예정이던 2019 하반기 글로벌 일자리 대전(일본·아세안 취업박람회)을 취소하기로 최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고용부와 코트라(KOTRA),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매년 개최하는 이 행사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외 취업박람회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열린다. 올해 상반기엔 5월 31일과 6월

1일 열렸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 이후 국내에서 불매운동 등 한·일 갈등이 길어지는 분위기다보니 이전처럼 일본 기업 참여율이 가장 큰 상태에서 행사를 열기엔 무리가 있다고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며 “박람회에 참여하는 일본 기업의 비중을 줄이는 등 여러 대안을 검토 중”

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하반기 박람회 참여 기업 명단을 아직 만들지 않았지만 올해 상반기 때와 비슷하게 참여시킬 예정이었다. 상반기 팬 15개국 184개 기업들이 참여 (채용 희망 인원 1121명)했는데, 일본 기업이 115개사(62.5%)로 가장 많았다. 북미 기업이 22곳, 아시아·중국이 21곳, 유럽 기업이 11곳 참여했다.

박람회가 취소되면서 해외 취업을 준비해왔던 준비생들은 혼란함을 감추지 못 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한국경제

2019년 08월 05일 월요일 A15면 산업

현대重 “또 쟁의조정 신청한 노조, 파업하겠단 뜻”

〈중앙노동위원회〉

사측 “노사 대표 교섭 재개 대화 통해 임협 마무리해야”

현대중공업은 노조가 재차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대화를 통해 교섭의 접점을 찾기보다는 또다시 파업에 나서겠다는 의미”라고 4

일 지적했다. 노조는 중노위의 행정지도에 따라 회사와 교섭을 재개한 상황이다.

사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 “중노위의 행정지도에 따라 노사 대표가 참여해 교섭을 재개했고 아직 네 차례밖에 교섭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다시 조정을 신청한 것은 휴가가 끝나는 대로 파업에 나서겠다는 의도”라고 적었다.

사측은 이어 “이런 노조 방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중노위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면서 “파업보다는 교섭을 통해 올해 임금교섭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6월 말 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중노위는 ‘노사가 성실히 교섭하라’고 권고

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노조 파업권은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합법이라고 본다. 중노위가 행정지도를 내린 상태에서 재차 쟁의조정을 신청하는 건 이례적이다.

노조는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을 두고 조정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7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9일은 연월차) 16일간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민주노총 조합원 무더기 기소

검찰, 집시법 위반 적용

전국민주노동총연합회(민주노총) 조합원 30여명이 청와대 앞, 고용노동청, 대검찰청 청사 등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김수억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등 31명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지회장은 지난해 9월 20일부터 17일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4층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며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 해결에 정부가 직접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해 11월엔 대검찰청 청사로 비에서 현대·기아차와 한국GM 등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법 파견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

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올해 1월에는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김용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이제 그만’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며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도 있다. 집시법상 청와대 앞은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된 곳이다.

검찰은 청와대 앞 기습시위 등 6차례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1월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기초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증거자료가 확보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들어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도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쌍용차 임금협상 10년째 무분규 타결

상여금 매달 지급 합의

쌍용자동차는 지난 1일 임금협상 잠정 합의 후 실시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합의안이 74.6%의 찬성률로 가결됨에 따라 국내 완성차업체 중 처음으로 올해 임금 협상을 최종 마무리 지었다고 2일 밝혔다. 쌍용차 관계자는 “회사가 현재 처한 위기 상황을 염중하게 받아들이고 회사의 생존과 고용 안정을 위해 생존 경영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노사가 인식을 같이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신속하게 최종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로써 쌍용차 노사는 2010년 이후 10년 연속 무분규로 교섭을 마무리 짓게 됐다. 노사 합의사항으로는 기본급 4만

2000원 인상, 경영위기 타개 동참 장려금 100만원 지급, 상여금 지급 주기 변경 등이다. 상여금 지급 주기 변경은 최저임금 제도와 맞물려 현행 짹수 달에 각 100%로 지급하던 것을 12개월로 나눠 지급하는 것이다.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돼 고액 연봉자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예병태 쌍용차 대표이사 사장은 “회사의 생존과 고용 안정을 위해 양보와 결단을 내려준 노조에 감사드린다”며 “하반기 이후 생산·판매 증대는 물론 품질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과 경영 효율 개선에 전 임직원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이희건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달 31일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남과 북이 하루빨리 공단 재가동에 힘을 모아주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재개 희망 엿봤어요 복합물류단지로 불씨 살릴 것”

**이희건 개성공단협동조합 이사장
중단됐던 파주 물류단지 조성 박차**

긍정의 마음으로 온갖 시련과 고난을 이겨냈다. 그렇게 3년 반을 버텼다. 여전히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하지만 저 문이 다시 활짝 열릴 것이라는 그 믿음은 변함이 없다. 2016년 2월10일, 쫓기듯 개성공단을 빠져 나온 기업인들이 전한 한결같은 바람이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절망의 늪에서 일어나 새로운 꿈을 준비하고 있다. 바로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지난 달 31일 만난 이희건 경기개성공단 사업협동조합 이사장(63·중소기업중앙회 남북경협위원장)은 “아직 개성공단 재개 시기는 불확실하지만, 공단 재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업인들이 의기투합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는 개성공단과 15km 떨어진 파주 탄현면 자유로 성동 IC 인근 16만m²에 공단 입주 기업들의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800억 원이 투입된다.

2016년 개성공단 폐쇄와 함께 올스톱 됐다가 3년 만에 다시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해 남북화해의 물꼬가 열리면서 입주 기업인들이 공단 재가동에 대비, 투자에 나선 것이다. 사업 시행자인 경기개성공단사업

협동조합이 경기도에 실시계획인가를 낸 상태로 빠르면 내년 초 첫 삽을 뜯다. 이 이사장은 “복합물류단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생산용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보관할 물류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지에 개성공단 상품과 북한산 공산품 등을 전시 홍보하는 판매장을 만들어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전해왔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3년 반. 입주 기업인들이 겪는 고충은 심각하다. 이 이사장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 124곳 중 15% 가량이 가동을 멈췄고, 나머지 기업 상당수도 이익이 급감, 경영난에 처해 있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막대한 영업손실을 떠안은 데다 인간비 등의 경쟁력에서도 밀려난 계원인이다. 그가 대표로 있는 나인도 경영난이 심각하다. 기능성 속옷을 생산하는 나인은 한때 북한 근로자 520명 등 전체 직원이 550명에 달했지만, 지금은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매출도 절반 넘게 하락했다.

이 이사장은 아직도 2008년 개성공단에서 공장 기공식을 열던 날 가슴 벅찼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남과 북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하루빨리 공단 재가동에 힘을 모아주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글·사진 이종구 기자

키즈 유튜버... '아이 꿈'일까 '애테크'일까

(아이+재테크)

'보람튜브'로 본 현주소

안승진·권구성 기자 prodo@segye.com

"(짜장라면) 진짜 맛있겠다. 숨어서 먹어야지!"

아빠와 함께 키즈카페에 놀러 간 이보람(6) 양. 한참을 놀더니 하기진 배를 부여잡고 키즈 카페 내 매점으로 향한다. 보람이가 매점에서 고른 것은 평소 즐겨먹던 '짜장라면'이다. 보람이는 짜장라면을 능숙하게 비비더니 젓가락으로 돌돌 말아 입안 가득 밀어넣는다. 순간간에 짜장라면을 다 먹더니 부족했는지 또 다른 라면을 주문한다.

최근 서울 강남의 한 별당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회제가 됐던 유튜브 채널 '보람튜브'의 한 영상 속 장면이다. 보람이가 라면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담은 이 영상은 지난해 12월 유튜브에 올리와 지금까지 조회 수 3억4863만회를 기록했다. 영상의 높은 반향에 '보람이가 짜장라면 먹는 거로 수십억 벌었다'는 우스갯소리

아이도 부모도 '보람이 로망'

월 최고 매출 45억원 '보람튜브' 화제

구독자 3150만명... 국내 개인채널 1위

키즈 유튜버 컨설팅·사교육까지 성행

마저 나오고 있다.

최근 아동을 내세운 이른바 '키즈 유튜버'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자녀를 인기 유튜버로 만들겠다는 부모도 늘고 있다. 아이들의 장래희망도 '유튜버'가 됐을 정도다. 다만 어린 아이에 유튜브를 활용한 수익활동에 나서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리 아들도 보람이처럼! 키즈 유튜버 인기 2일 유튜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유튜브 키즈·교육 콘텐츠의 시청시간은 전년 대비 95%나 증가했다. 당시 유튜브가 함께 발표한 '국내 채널 성장 톱20'에서 키즈 채널의 이름은 8개나 올랐다.

지난해부터 폭발적 인기를 얻은 것으로 전해진 보람튜브의 경우 이양의 일상을 소개하는 '보람튜브 브이로그' 채널과 장난감 리뷰를 다룬 '보람튜브 토이리뷰'의 구독자가 3150만명을 넘는다. 국내 개인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수 1위에 해당한다.

키즈 유튜버의 성장과 함께 이를 채널의 수익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유튜브 분석 사이트인 '소셜블레이드'는 보람튜브의 월 최고 매출이 384만달러(약 45억6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보람튜브의 협찬수익을 제외한 것으로, 실제 수익은 더 높을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키즈 유튜브 채널을 보는 것만큼이나 직접 도전하는 것도 인기다. 자녀와 함께 유튜브 채널



'규리의 즐거운 생활'을 운영 중인 김시연(4·여)씨는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딸아이의 모습을 영상에 담고 싶다는 생각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다"며 "동영상 편집기술을 배우기 위해 스터디 활동도 했다"고 말했다. 유튜브 키즈연구소 '키움'의 주운주 대표는 "보람튜브가 이유가 되며 아이들과 유튜브를 하고 싶다고 연락하는 부모들이 많아졌다"며 "우려의 시선도 있지만 부모들이 아이와 어떤 걸 찍을까 고민하며 유대감이 생기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설명했다.

◆키즈 유튜버 앙상 사교육도 성행

최근에는 키즈 유튜버를 앙상하는 전문 컨설팅과 사교육도 성행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스피치 학원은 방학을 맞아 '키즈 유튜버' 강의를 개설했는데, 8차례 진행되는 강의가 순식

간에 마감됐다. 이 학원 관계자는 "유튜브에서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하는 법이나 발음, 목소리를 특강 형식으로 강의하고 있다"며 "잘 하면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처럼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아이들이 자신감을 키워가고 있다"고 밝혔다.

키즈 콘텐츠의 경우 아이들의 일상을 담는 것 만으로 흥행 가능성이 높아 성인 유튜버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다는 평가도 있다. 인기 유튜버를 여럿 보유한 MCN(다중채널네트워크) 업체 관계자는 "성공한 키즈 유튜버의 사례를 보면 부모가 원래 영상편집에 관심이 있었고 아이와 함께 노는 과정을 담아 올리다 우연히 뜯는 경우가 많았다"며 "과거 아역배우들처럼 외모가 중요하지 않고 자극적인 콘텐츠보다 지속적인 콘텐츠를 올리는 키즈 유튜버들이 좋은 반응을 이끌

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치열해지는 경쟁에 '아동학대' 우려도 커졌다. 최근에는 아동 콘텐츠에 대한 조치를 더 강화하고 있다. 아린 자녀를 유튜브에 출연시켜 수익을 노리는 일종의 '애테크'(아린 애+재테크)가 늘면서 아동학대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자녀를 유튜브에 출연시킨 부모들이 조치 수를 높이기 위해 무리한 행동을 시키거나 자극적인 주제를 다뤄 종종 논란이 일기도 한다.

지난달 한 유튜브 채널은 여성 살 쌍둥이에게 10kg짜리 대왕문어를 통째로 먹게 하는 영상을 올려 빙축을 샀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가학적이다', '합법적 앙벌이다'며 비판했고, 쌍둥이의 아버지는 사과와 함께 해당 영상을 삭제 조치했다.

보람튜브도 2017년 당시 4살인 이양에게 자동

차 운전을 하게 하고, 임신을 가장한 연기를 유도하는 등의 영상을 올려 아동보호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이양 부모에게 아동보호기관의 상담을 받으라는 보호처분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모두에게 개방된 유튜브 플랫폼의 특성이 이동학대의 우려를 높인다고 지적한다. 플랫폼의 진입장벽이 없어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해 올릴 수 있지만 정작 콘텐츠에 대한 규제나 가이드라인은 허술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조회 수가 높을수록 수익이 증가하는 유튜브의 구조적 특성은 콘텐츠가 지극적으로 변질되는 것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배철순 개인정보분석 연구소 소장은 "보람튜브는 경쟁자가 적었던 시절부터 유튜브를 올려 해외 팬들을 많이 만들 수 있었지만 지금 시작하는 키즈 유튜버들은 경쟁 우위에 서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미국서도 논란...아동 출연 유튜브 콘텐츠 대책 모색 시급

현재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의 경우 사실상 규제 범위의 밖에 방치돼 있다. 현실적으로는

"아동학대" 우려 목소리도

업기억방에 자동차운전·임신 연기까지 조회수 높아려 자극적 주제 다뤄 눈살 "아동 출연 콘텐츠 규제 없어... 대책 시급"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것 외엔 별다른 대안이 없다. 최근 미국에서 키즈 콘텐츠의 소아성애자파문을 겪은 유튜브는 키즈 콘텐츠에 대해 비교적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플랫폼의 규모가 방대해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례로 유튜브가 자신의 아동보호 정책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1분기 1회에 콘텐츠만 80여만개에 달한다. 콘텐츠가 끊임없이 생산되니 플랫폼에서 아동을 온전히 보호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유튜브는 아동 콘텐츠를 별도의 '키즈 앱'으로 분리시키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동 콘텐츠의 댓글 기능과 아동 콘텐츠에 대한 대처 방송도 제한했다.

근본적으로 아동을 수익활동의 목적으로 유튜브에 출연시키는 자체가 일종의 '노동'으로도 볼 수 있는 만큼 보다 엄격한 규제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정부가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으로 보호하고 있다.

고우현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매니저는 "유튜브를 비롯해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콘텐츠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로서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제가 어렵다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